

시론



김명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호남은 민주당을 버릴까

민주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이 전국평균 37.69%를 밀도는 35.49% 저조한 투표로 민주당에 차가운 경 고장을 보였다. 역대 가장 낮은 광 주의 6·1지방선거 투표율 37.7%로 침묵의 회초리를 때린 이후 두 번째 경 고장을 다시 보낸 셈이다.

호남 투표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적극 투표 층이 크게 줄었다. 확대명의 기류 속에서 이번의 가능성이 낮아 승패가 이미 기울어 투표에 흥미를 잃었다. 박빙 구도였다면 투표율은 더 높았을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층도 일부는 투표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낙연계 등 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은 투표참여의욕이 일찌감치 사라졌다. 하지만 호남민심이 민주당에 대해 싸늘해졌다는 점을 가늠해 보아서는 안 된다. 민심의 변화는 지도부의 정국운영 행태에도 기인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순과 언행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

과 시·도의원 평가도 영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보다는 덜하다. 6·1지방 선거 불공정 공천에 대한 불신과 후유증은 여전하다. 당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불공정 불투명 공천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공천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의 자기 사람 심기, 사적 인연 공천이 이뤄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싸늘한 호남민심은 재선을 위한 자기사람심기만 우선시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실망과 심판의 결과이다.

호남 최고위원 선거결과를 보자. 호남 단일 후보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전북에서 5.82%로 7위를 기록한 데 이어 전남 14.55%로 3위, 광주에서도 정청래 의원에 이어 22.27%로 2위에 머물렀다. 호남에서 압도적 득표로 5위안에 들어간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2표인 최고위원 선거를 감안하면 호남에서 차가운 심판을 받은 셈이다. 친문, 친낙, 586 운동권 등 비명계의 지원을 얻어 지도부에 진 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호남 대표성을 더 이상 주장 하기는 어려워 졌다.

호남의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 고의 메시지이다. 호남의 후보라고 내세우지만 호남 대표성을 누가 부여

했다. 냉정하게 본다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대표라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자기 공천과정에서 지도부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익을 관철할 통로, 대리인으로서 호남 동료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평당원인 최화용 후보가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상대로 40%득표 결과는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인식을 보여 주었다. 계파대리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 등의 폼파도 있지만 모든 정치행위는 의도가 있다. 세상이 모두 겹치지 훑인 게 있다.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발효가 되는 법이다. 현역의원 견제 민심이 밑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평당원이 40%지지를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 지선의 연이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셀프공하면 호남에서 차가운 심판을 받은 기에 승패가 기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재명이 5개월도 안된 지난 대선에서 1천600만 표를 얻고 0.73%로 아깝게 진 대선후보로 여전히 지지층이 두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력한 대항파 부재, 박용진이 선전 했지만 역부족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정권 정정보복과 검찰 국가를 착각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일사 분란한 지도제대로 강력히 견제하고, 정국주도권을 잡아 제1당으로서 유능하게 국정중심 역할하기를 기대하는 당심과 민심이 표출이다.

8월29일 출범하는 이재명 대표제제의 첫 번째 과제는 경선기간 내내 공격받은 사당과 우러에 대한 불신 심역할하기를 기대하는 당심과 민심이 표출이다.

8월29일 출범하는 이재명 대표제제의 첫 번째 과제는 경선기간 내내 공격받은 사당과 우러에 대한 불신 심역할하기를 기대하는 당심과 민심이 표출이다.

8월29일 출범하는 이재명 대표제제의 첫 번째 과제는 경선기간 내내 공격받은 사당과 우러에 대한 불신 심역할하기를 기대하는 당심과 민심이 표출이다.

社說  
근로자 연봉도 수도권과 격차 지방시대 요원

광주에서 근로자 1인당 연봉이 전국 평균(3천830만원) 이상인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광양·여수·순천을 제외하고 모두가 해당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시울)이 국제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방정 산 신고현황'은 지자체 격차가 국토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급여를 많이 주는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을 반증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로 7천440만원, 2위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로 7천410만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많다. 3위는 용산구로 6천470만원이다. 상위 10곳 전부 수도권에 위치했으며 이 중 8곳은 서울이 차지했다. 나머지 2곳은 경기도 과천(6천100만원), 성남시(5천만원)였다.

광주·전남의 경우 열악했다. 광주는 남구 3천780만원, 서구 3천750만원, 동구 3천700만원, 광산구 3천560만원, 북구 3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무안 3천730만원, 영광 3천540만원, 나주 3천450만원, 신안 3천360만원,

광성·장성 각각 3천350만원 등의 순이다. 광양제철과 국가산단이 소재한 동부권인 광양은 4천230만원, 여수 4천80만원, 순천 3천860만원으로 대조됐다. 강원·충북·전북·제주 지역 또한 1인당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가 전무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올랐다는 하소연이다. 봉급 생활자들은 월급만 제자리라고 탄탄한다. 이번 연봉 분석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볼보듯 뻔할 게다. 뼈 빠지게 일해도 '취꼬리' 수준으로 자기급이 든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 유수의 기업 뿐 아니라, 같은 인제들도 모두 수도권 흡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가난한 지역의 위기는 갈수록 커진다.

세 정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상대적으로 급여 조건이 좋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적극 이전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모든 분야를 망라해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시기상조 아닌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일고 있다.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강조하나 시기상조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에 포함된 보유세 항목은 반발에 따라 삭제된 상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에이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55.6%는 보유세에 동의했는데 반대 의견에도 주목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30%를 밀도는 마당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수의 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등록을 하는 대신 유기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한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지원 등 복지과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광견병 명분 등 징벌적 성향의 세금으로 시작된 정책을 불공정 조세 논란 등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전국 반려견 전수조사를 통해 100% 등록을 완료했고, 민관이 힘을 합쳐 보유세 시행에 성공했다. 세금은 '반려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호응에 힘입어 정착했다. 그러나 현재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천92만 7천가구 중 15%인 312만 9천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온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경제 문제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한 순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유기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야생화된 경우가 늘면서 사회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한 현실부터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 교육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실패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캔디의 함정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들장미 소녀 캔디'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웃고 참고 또 참지 울기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쩔지 쓸쓸해 하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겨울 속의 나하고,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캔디아, 울면은 바보다 캔디 캔디아.' 텔레비전 속 캔디를 따라 '캔디 송'을 부르며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어야 되는 줄 알았다.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웃으면서 달려야 되는 줄 알았다. 울면은 바보가 될 것 같아 남몰래 눈물을 쓱 흘

렸었다.

글로연의 그림책 '착한아이 사랑이'에 등장하는 사람도 어른들의 기준에 딱 맞춘 착한 아이이다. 이름처럼 달콤한 사랑이는 친구들이 괴롭히고 놀려도, 넘어져 다쳐도 울지 않는 착한 아이이다. 말썽쟁이 동생이 못살게 굴어도, 정성들여 그려 놓은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화 한 번 내지 않은 착한 아이이다. 장난감이 갖고 싶어 몇 번이나 눈이 가면서도 사달라고 떼쓰지 않는 사랑이는 언제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이다.

"착하니가 정말 예쁘다!" "밥도 잘 먹고, 착하네."

어른들은 쉽게 말하지만 듣는 아이들의 어깨는 무겁다. 착하지 않으면 미운 아이가 될 것 같고, 밥을 잘 안 먹으면 나쁜 아이가 될 것 같다. "착하지? 정말 착구나!" 어른들이 마음대로 씌워놓은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혀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가 없고, 화나도 화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

랑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속내를 공공 감춘 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착한 것 과 예쁜 것, 밥 잘 먹는 것과 착한 것은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아니야, 나 괜찮아!" 손사래를 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높여 말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입 꼭 닫고 있는 게 평화로운 것 같을 때다. 아니라고 말해도 먹힐 것 같지 않고, 말해봤자 마음만 더 답답해 화가 치밀 것 같은 마음에서다. 마음 속 감정들을 애써 누르며 더 이상 상처 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공공 숨겨 놓은 아픔들을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아 마음에 치는 방어막이다.

하지만 목소리 높여 괜찮은 척, 함박 웃으며 손사래를 칠수록 마음은 더 타프다.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도 쓸고 닦아내야 없어지는 것처럼, 함박웃음 속에 골짜기 삼켜버린 마음 속

감정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깊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어떤 식으로든 터를 내게 된다. 마음이 아픈 만큼 어두워진 기운들은 몸 안을 돌며 무기력증과 두통을 일으키고 면역력 저하에 따른 또 다른 질환들을 가져오게 된다.

어느 새 밤바람이 시원하다. 울 가을엔 우리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에게 말 한 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다. 직장이기에, 아파이기에, 엄마이기에, 며느리이기에 공공 물어야만 했던 우리 안의 감정들을 꺼내어 각각의 방법으로 털어내도 좋을 것 같다. 언제나 외롭고 슬플 땐 소리 내어 엉엉 울어도 보고,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도 하고, 웃으면서 푸른 들을 신나게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캔디들과 함께 살아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서로의 가슴에 힘이 되어 용기가 되든, 파스한 마음들이 담겨 질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비워야만 채울 수 있기에...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율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시론동한 반응도 있었지만 관련 공업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

문제는 관련법과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일반 차량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를 피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해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머리나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로 헬멧이 최선이기에 불편함보다 안전함을 택하자.

둘째,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이러폰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하면서 통화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등 이용



을 한다면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셋째,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나 날씨에는 전조장치(전조등, 비상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주간보다는 해질녘 무렵 이후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띠를 착용하는 등 나의 위치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안전모를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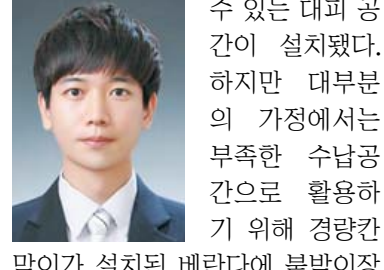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우리 집 숨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를 보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점점 초고층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형태의 특성상 대형 화재의 취약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 비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규정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바깥 공기와 접하고 내화 성능이 확보돼 화재시 1시간 정도 보호 받을 수 있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베란다에 불법이장 등을 설치하고 대피 공간 역시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화재 시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언제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화재 시 피난할 공간과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

(안재용·담양소방서 교서119안전센터)

그래픽 뉴스

소상공인에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기업형 육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원 상당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환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성장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코로나 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 신제책·종합적 재기 지원 (대입차 대상 참가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법률지원 대폭 확대)
- 충출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기업·소상공인경제 기업을 확대·복지원 강화)
- 기준 초과저금리 대출한도 및 대상확대
- 소비행사 대면으로 전환, 연 5회 이상 개최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신사업창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 제시)
- 전통시장 디지털화 (온라인 매출 증대유도, 카드형 온라인 상품권 도입·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

**성장을 추구하는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 혁신창업 교육 (대학·선계기업·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 교육훈련 실시)
- 소상공인 스케일업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나눔 로컬상권 조성**

- 로컬브랜딩·골목상권화 추진 (로컬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고 상권발전은 견인하도록 체계적 지원)
-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 (공간재구성, 소상공인 교육 등을 전문기획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도입)
-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추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건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